

동향분석센터 주최 특별좌담회

한미 FTA와 여성

- 일시: 2006년 8월 4일(금) 10:00~12:00
- 장소: 프라자호텔 비즈니스 센터(5층)
- 참석자: 김영옥(본원 인적자원연구실장)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송영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심문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사회: 문유경(본원 동향분석센터 소장)
- 정리: 강민정(본원 동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현재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협상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에서부터 협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반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본원 동향분석센터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예상하여 보고, 여성노동과 여성농업인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기획하였다.

I.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자(이하 사회): 그동안 FTA(자유무역협정 혹은 Free Trade Agreement) 자체가 산업과 관련된 논의라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한 집단으로 보고 살펴보기가 어렵다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여성과 관련된 주요 논점을 짚어보면, 먼저 비정규직, 고용불안, 양극화 등과 같은 여성노동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농업개방과 관련한 여성농민들의 어려움 등이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김영옥(이하 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에프타 혹은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기구. 정리자)가 그것이다. 칠레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사실 별 논의가 없었다. 이때와는 달리 왜 한미 FTA 이슈가 특히 부각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FTA, 양자간 무역, 지역 무역이 점점 강화되는 등 무역규제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미국과의 FTA가 큰 이슈인가를 논의해 보아야 한다.

송영관(이하 송): 개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스스로 개방하는 것(80년대 관세 인하의 사례), 둘째, 다자간 체제를 통해 개방하는 것, 셋째, FTA 등 양자간, 지역 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사실상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으나, 다자간 체제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한-칠레 FTA같은 경우 무역관계가 크지 않으

며, 일종의 준비과정 또는 연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FTA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싱가포르와 칠레는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해서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대등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미국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큰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미국, 중국, 일본, EU에 집중되어 있으며, FTA는 무역교역량이 많은 나라와 해야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개방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이다. 국민소득 2, 3만 불을 지향한다고 할 때, 평균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연 8천만 원의 소득이 필요한데, 어떤 산업들이 이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개방을 통해 이러한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논의는 쉬울 것이다.

문현아(이하 문): 한미 FTA를 통한 규제완화로 인해 여성노동자나 일반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지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송: FTA가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가 있는 규제를 제외한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없애는 것이 개방의 핵심 논의이다.

사회: 이번 한미 FTA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추진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송: 일본, 인도,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 논의가 있어왔으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체결이 어려웠다. 미국과는 2001년부터 분기별로 통상조정회의를 해왔으나,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두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98년 IMF 이후 미국과 투자협정을 제안했으나 스크린쿼터 문제로 결렬되었고 작년 1월부터 FTA 예비회담이 열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심했었다. 그러다 외교통상부의 노력으로 작년 7월말부터 미국의 태도 변화로 급물살을 탔고, 본격적인 협상은 올해 초 시작되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반대가 심한데, 협상 내용 중 농업부분은 알려진 것보다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최근 칼로스쌀이 유찰된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우리의 소비수준이 높아져 도정 후 일주일이면 부식이 시작되어 맛이 떨어지는 미국 쌀을 외면한 결과로서 미국 쌀의 경쟁력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 FTA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확

실히 해야 하는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송: 국회에서도 FTA 특위가 지난 월요일에야 뒤늦게 발족되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도 FTA관련 연구원이 파견되었다. 청와대에서도 FTA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늦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도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II. 한미 FTA와 여성노동과의 관계

사회: 한미 FTA 협상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여성노동 문제를 봤을 때 개방, 신자유주의 등의 논리가 강화되면서 여성 고용이 양극화 되고, 저학력 비정규직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된다. 과연 한미 FTA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앞으로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등을 이야기해 보자. 먼저 FTA 체제 하에서 여성 노동이 얼마나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가?

문: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그 이면에 FTA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아서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NAFTA(나프타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FTA. 정리자)와 비교해서 봐야 한다. 멕시코는 그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멕시코의 상황을 볼 때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여성 노동의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하면 했지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사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이미 한국에 침투해 있다. 지금 막지 않는다면 NAFTA 체제의 여성들처럼 생존 위험과 저임금, 열악한 환경이 초래될 것이다.

송: NAFTA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멕시코 산업의 구조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남미는 대부분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농장, 농업 위주이고 거대 지주가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60년대 공장 활성화는 저가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농촌에 있을 때는 비정규직이 아니었으나 도시화·공업화로 인해 도시로 유입된 노동력이 비정규직화 되었던 것이다. 멕시코도 저임금에 기초한 여러 산업이 발달했으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점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히 NAFTA의 경우를 보고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김: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이미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특히 여성의 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지금 한미 FTA를 체결해서 이 상황이 악화될 것인가로 논의를 한정해야 할 듯하다. 우리의 무역구조를 봤을 때 멕시코와는 다른데, 우리나라의 여성취업자들 중 제조업은 10%대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는 계속 줄어든 것이다. 우려하는 것처럼 한미 FTA가 제조업 종사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비스직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특히 영향이 클 것인가를 세분화시켜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서비스직은 주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한미 FTA가 특히 고급서비스 부분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분야에는 여성이 적으므로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내수 침체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투자 활성화로 고용창출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볼 때 비정규직화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적인 부문에까지 침투할 것인지를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득을 볼 수 있는 부문은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로 오히려 국내 기업의 여성근로조건보다 나은 조건일 수 있다. 또한 일부 고학력 여성들의 일자리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 앞서 지적하셨던 NAFTA와의 차이점은 인정하지만,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 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화의 문제는 IMF 이후로 심화되었는데, 한미 FTA를 제2의 IMF라며 반대하는 이유는 고학력이거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직에 진출해 안정된 고임금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많은 이들의 경우,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할 것이다. 고용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송: 비정규직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한미 FTA와 비정규직 문제를 연결할 수 있다. IMF 이후 평생 고용 개념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선택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미 FTA와 연결되면 더 심화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노동법을 갖고 있는 한 비정규직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획득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미 FTA와는 별개인 듯하다.

김: 국내기업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을 분석할 경우 동일선상의 비교는 힘들지만,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이 여성에게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

실이다. 노동시간이 적고, 선입견이 적어서 여성들을 많이 뽑고 승진도 차별이 없다. 결국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환경에 놓인 외국기업들도 질 높은 여성인력을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미국 자본이 유입될 텐데, 인력관리 측면만 볼 때 여성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오히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관리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가격이나 품질 양쪽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강한 부문은 더 강해지고, 약한 부문은 더 약해질 것이다. 이것이 양극화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간극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약한 부문에 대해서 사회정책, 복지를 통해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FTA 논의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III. 한미 FTA와 여성농민과의 관계

사회: 여성과 사회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수록 생산적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여성농민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심문희(이하 심): 역설적으로 앞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 농촌에 천만 명의 인구가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일 수 있다. 사실 지금은 개방이나 FTA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식량 자급률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5%에 불과한데, 식량의 문제가 주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의 상품인가 하는 데서부터 입장과 논의 방향이 다를 것이다. 사회변화 속에서 지금 농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면, 10년 후에 나타날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현재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경쟁력 없는 것은 도태된다면서, 은퇴 이후 쉬는 곳으로만 농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350만 인구가 이후에도 농촌에 남아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토지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젊은 여성농민, 후계인력들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의 여성농민들은 구조조정, 은퇴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농민 비중이 60% 이상이지만, 현재 농업을 지탱하는 여성농민을 위한

대책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한미 FTA를 통해 총체화되고 노골적으로 농업을 종결시킬 것이다. 여성농민들은 그 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겸업, 부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될 때 일순위로 농업에서 퇴출되는 것은 여성이다.

김: 여성농민이 100만 정도 되는데, 여성 취업자 수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농업이 계속 줄어든다면 실업률 수치가 높아지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여성농민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제 겨우 참여율의 50%를 넘기려는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100만 여성농민의 농업생산 참여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

송: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한 국가에서 농촌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품적 의미 외에 가지는 의미가 크다.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쌀이 전혀 생산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농업 분야에 매우 민감하다. WTO에서도 농업 협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수출보조금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농산품에 대해 가격 지지 정책을 펴왔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소득으로 제공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즉 가격 지지가 아니라 소득보전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 미국은 105%의 목표가격제(정부가 농산품 대한 목표가격을 정한 뒤 시장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 정리자)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하다. 농민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다. 또한 농가 부채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개방농정 속에서 농민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1~2억의 농가부채를 지고서는 갚기도 힘들어졌다.

스위스도 FTA를 추진하다가 농업 때문에 중지했던 사례가 있는데, 특히 유전자 조작과 같은 인증이 되지 않은 먹거리 문제로 인해 거부했다.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중단된 것이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유전자 조작 종자로 인한 분쟁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도 농업에 있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 한미 FTA 논의의 경우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이 있고, 안전한 식품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취약하다. 유전자 조작, 농약, 도정 등 미국의 높아지는 요구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비자권리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 한-칠레 FTA 때에는 포도농가에서 반대가 많았다. 한미 FTA의 농

산물 중에도 어떤 부분 - 예를 들면 축산, 쌀, 굴 등 - 이 타격이 클지 세밀하게 파악효과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 미국과의 경쟁력에서는 모든 품목이 불리하다. 특히 곡물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54배정도이며 가격은 1/5 수준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

김: 칠레와의 FTA 이후 포도재배농가에의 영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심: 농림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평가에서는 -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당장 평가는 힘들지만 -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다. 구체적으로는 포도와 복숭아 중심으로 폐원 보조금을 제공했으나 너무 많은 농가가 신청해서 보조금 제공이 없어졌다.

김: FTA가 있을 때마다 반대의 주체가 다른 것 같다. 칠레의 경우 농민단체가 주축이 되었는데, 한미 FTA는 농민이 주축이 아니라 스크린쿼터, 의약반대 등 다양화된 부분으로, 지형이 변화했다.

문: 한미 FTA가 포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칠레 때는 농민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전방위 개방이다. 반대 논의의 경우 소비자 입장의 담론이 많지만 찬성의 경우에는 없다. 사과를 일 년에 하나 먹는 것과 그것이 일상화되었을 때의 가격경쟁력은 다르다. 생협이나 유기농 농산물 등이 많아졌는데, 이것 또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위한 중산층 이하의 노동이 제공되는 것이다. 더욱 노동소외가 일어나고, 양극화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사회: 이와 더불어 농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심: 이주여성의 문제는 농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10명 중 1~2명은 이주여성의 자녀이다. 과연 이주여성들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여성 농민들이 법적 보장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농업에 종사한 경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에 한미 FTA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환경이 변한다면 누가 농촌을 지탱하고 버티며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 FTA가 대전제가 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없다. 기업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제를 바꿔야 한다.

IV. 향후 과제

송: 구체적으로 ‘한미 FTA와 여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간접적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것은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의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심: 세계에 양심적인 자본이 있는가. 자본을 가진 이들이 여성, 갖지 못한 이들의 삶을 고민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속에 인간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 한 예로 제네바에서 열렸던 DDA(도하개발아젠다: 21세기 국제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에 시작된 WTO 다자간 무역협상. 정리자) 협상은 중지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전제를 바꿔야 한다. 2, 3만 불 시대의 혜택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행복한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문: 한미 FTA가 여성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더 많다. 양질의 일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막아야 한다.

김: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협상단에만 맡겼고, 입장 설명이나 정보 공유, 설득이 미약했다. 충분히 알려주고 논의에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적 측면에서 무역 전반을 보는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역 정책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 즉 이를 계기로 무역정책의 성별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예로 미국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 요구를 볼 수 있다. 논의 자체에 대응하기 위해 서라도 각론에 대한 부분까지도 성인지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이번 좌담회를 통해 FTA는 물론 전반적으로 무역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연구가 미진하여, 향후 이 방면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